전국민 보편?…與, 4차 지원금 공론화

선별지급 여부·대상·시기 등 본격 논의 착수

당내선 전국민 지원 여론…이달 추경 편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국민 또는 선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 영업제한 업종 등 피해계층을 중점 지원해야 하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경기 활성화와 국민 위로 차원에서 전국민 지급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 시작되지만, 여권에서는 최근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공론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전국민 지급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이라 본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도 제시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올해 첫 재난지원금은 좀 더 과감하고 전국민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데 장기적으로 유용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총 3차례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총선 직후 추경을 편성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일괄 지급됐다.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총 14조3천억원이 투입됐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상황과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별 지급 방식으로 이뤄졌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1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1월 중순까지 코로나 상황을 보고 그에 맞춰 추경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4월 재보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다"며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씨젠의료재단 방문한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업인 씨젠의료재단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처벌 '10인 이하' 소상공인 제외

면적 1천㎡ 미만 다중이용업소도 제외될 듯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면적이 1천㎡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1%밖에 되지 않고,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며 "상당히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與 제3후보 한계론 부각…김동연 역할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민주당 내 '제3의 후보' 등장 가능성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외부인사 영입과 관련해 "당에서는 '시간이 너무 없다, 촉박하다'는 의사를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히며 제3 후보 등장 가능성을 낮게 보는 언급을 했다.

박 장관은 본인 거취에 대해서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발짝 나아간 발언을 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선 경선의 판을 키우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거물급 야당 후보에 맞설 '제3 후보'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특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행보에 시선이 집중됐다. 박영선 장관 역시 지난해 말 직접 김 전 부총리를 당에 천거하며 영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박 장관이 작년 11월쯤 '품이 넓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인사로 김 전 부총리를 당에 추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도부 일각에서도 상고와 야간대학 출신으로 경제관료 정점에 오른 김 전 부총리의 입지전적 스토리를 강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임 중 소신 발언으로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행보 역시 여당에서 이탈한 중도층을 돌려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보궐선거가 불과 석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당내 조직 기반이 전혀 없는 그로서는 선거전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밖에 없다.

친문(친문재인)계 일각에서는 김 전 부총리가 보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여당에 들어와 주요 역할을 한다면 충청도(충북 음성) 출신이란 배경과 맞물려 내세워 대권 구도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총리와 가까운 한 인사는 "그가 민주당의 혁신에 관심과 고민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文,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오후 5시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사면 찬성 47.7%, 반대 48.0%

리얼미터 조사…부울경 찬성 66.6%, 호남 반대 76.6%

지지정당별 민주당 88.8% 反, 국민의힘 81.4% 贊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7%, 반대는 48.0%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4.3%였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찬성 66.6% vs 반대 29.4%)과 대전·세종·충청(58.3% vs 37.4%), 대구·경북(56.8% vs 31.3%)에서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광주·전라(19.3% vs 76.6%)와 인천·경기(39.6% vs 57.1%)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서울은 찬성 49.0%, 반대 47.6%로 갈렸다.

연령별로는 60대(68.1% vs 28.8%)와 70세 이상(68.1% vs 29.5%) 등 고령층은 다수가 찬성 의견이었다. 40대(31.5% vs 63.7%)와 30대(35.9% vs 59.1%), 20대(42.4% vs 51.6%)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다. 50대는 찬성 48.2%, 반대 48.0%로 엇비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면 반대 응답이 88.8%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1.4%에 달했다.

보수층은 찬성(67.5%)이, 진보층은 반대(75.1%)가 각각 우세한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찬성(51.0%)과 반대(43.5%)가 오차범위 이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安 뜀박질에 野거물들 출격 러시

나경원·오세훈에 금태섭까지

4·7재보궐선거를 석 달 앞두고 야권에서 '거물급' 출격 러시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주자군 가운데 선두를 다퉈온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6일 이달 중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서 돌연 체급을 낮춰 출발선을 박차고 나서 단독선두로 내달리자 관망하던 나머지 주자들이 끌려나온 모양새가 됐다.

전날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나 전 의원은 이미 당내 인사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고 조언을 구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 전 시장 또한 주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출마로 마음을 먹고 적절한 시기를 숙고하고 있는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안철수 대표와 함께 대권 잠룡으로 여겨져 온 오 전 시장이 시장 출마를 결단하면 야권 경선 레이스가 대선 경선에 버금갈 정도로 무게가 커지게 된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늦지 않게 1월이나 설 전에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 한다"며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피해·주거 지원 구상을 밝혔다.

이번 선거가 거리 유세를 금하는 온택트 경선이 될 것이란 점에서 거물들의 등판이 적잖은 흥행몰이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급매전문

후표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웃음꽃 활짝 핀 나날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즐거운 부동산 대표 유재관 올림

[급구]
○ 광주시내 빌딩급구(가부간 1주일내 결정)
○ 전남북 관내 농지및임야
== 조건 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토지보상금들고 대기중입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현대공인중개사
치평동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370-1900 010-2006-0115

〈 광주 인근 지역 매매 물건 구함 〉
(장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곡성)
물건의 종류 : 건물 / 대지 / 임야 / 전답 / 기타

〈 광주지역 매매 임대물건 구함 〉
물건의 종류 : 건물 / 토지

〈 급매물 단 시일 내 책임중개 〉

대표 공인중개사 김학제